

與, '이태원 국정조사' 의견 수렴 받는다…野 총공세에 고심

오늘 중진의원들 비공개 간담회
민주, 국정조사 대국민 서명운동
국민의힘 당 내부서 입장 엇갈려

국민의힘이 10·29 이태원 참사 규명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꾸린 특별 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 묻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다만 국회 의석 다수인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에서 막아내기 힘들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 여부뿐 아니라 여야가 대치 중인 예산 심사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특수본에서 10·29 참사 진상 규명에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고 밝혀왔다. 대통령실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 문제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도 당은 “강제력을 동원한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야당 반응이다. 야당은 국정 조사 요구서를 통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마야과의 전쟁 선포 등이 참사 발생

과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10·29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24일 본회의에 서 처리되면, 야당 단독으로 10·29 참사 조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만큼, 여론 전으로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고심은 깊다. 10·29 참사 진상규명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 의견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무의미한 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만 보면, 참사를 이유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제동 거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는 이제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정부 뒷받침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한 점도 국정 조사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협의를 결정할 때 윤 대통령 지적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친윤계(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로 꼽힌 장제원 의원 지난 10일 국회에

서 기자들과 만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펠담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수석 2명 퇴장 조치로) 의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난 이용 의원도 지난 10일 의원총회 당시 ‘당이 제대로 대통령실을 뒷받침하는 게 맞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가운데 의석수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여당이 참여하지 않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당이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초·재선 의원과 만나 당 내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주, 6년 만에 장외투쟁… 정부·여당 압박

참사 국정조사·특검 범국민 서명운동 선명한 야당 이미지 드러내며 與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6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 압박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

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이를간 여의도과 서울 용산역 등을 찾아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홈페이지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한 서명 제출 양식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고 13일엔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면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 장외투쟁은 주로 야당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당 차원에서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를 출범시키고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정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7년 홍준표 대표, 2019년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수용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중도·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극한의 장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

것.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새 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한 현역 의원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장외투쟁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에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인-태지역 자유·평화 위해 적극 기여”

주요 지역·국제 문제 입장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을 토대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EAS 회원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불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까지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

주, 뉴질랜드, 인도,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얀마 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꽂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절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시작은 오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서명식이 진행될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가 있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공동 연구를 완료하는 대로 추가 자유화 등을 논의해 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은 공동연구와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추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 외에도 아세안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센터’ 설립 등 공동 대응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익 기자